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다”

현대삼호중 블라스팅 하청노동자 집단 작업거부 ... 불법 물량제 폐지·4대보험 보장 요구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선행도장 전 블라스팅(샌딩) 작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2월 12일 집단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사내하청업체 네 곳 가운데 세 업체 노동자가 작업거부에 참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12월 12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 4차 아파트 입구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서문까지 행진하며,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다”라며 ‘불법 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는 ‘블라스팅 노동자 작업거부 돌입 결의대회’에서 “10월 중순부터 사내하청업체에 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보장 등을 요구하고 8주 동안 기다렸지만, 사측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작업거부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다.

지회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키 높이 이상 족장 설치와 고소차 작업공

간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조선소 가운데 유독 현대삼호중공업만 불법 물량제를 방치하고 묵인해 왔다”라며 “불법 물량제 폐지는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 물량제는 조선산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삼호중공업 원청과 업체들은 조선소 물량제를 단기 재하도급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안전 보건교육·

직무교육 미흡, 법률상 관리 사각지대 등 문제로 물량제는 위법이라고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사측이 물량제에 따른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임금 가운데 3.3%를 세금으로 떼었다. 물량제라서 노동강도가 높고, 죽장이 일부 없는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며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 당연히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

지회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라며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다. 물량제를 폐지하고 4대 보험 보장 등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겠다”라고 결의했다.

블라스팅은 조선소에서 선각 공정을 마친 철판 블록에 도장작업을 하기 전 페인트가 철판에 잘 붙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작업이다. 연마제를 압축공기와 혼합 분사해 철판 표면의 녹, 페인트, 그라인딩 흔적, 징크, 이물질, 마킹 글씨 등을 제거한다.